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 매달 20만원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 나서

전북 출신인 김운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된 가운데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



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

으며 총 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도내를 비롯한 전국에

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

정자를 공지하고 5월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솔루스첨단소재 OLED 공장 준공 OLED 소재와 전자박을 생산하는 솔루스첨단소재가 18일 익산 합영농공단지에 제조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김대중 도의원, 김태형 솔루스첨단소재 사장, 협력사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민주 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축산물 유통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축산물 유통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거래가격 비공개와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미보관 관행 등으로 유통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통해 과학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물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유통과 가축거래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3대 권한 확보로 전북 미래 바꿔야”

‘무소속 도지사 출마’ 김성수 세무사, 정책비전 발표... “사용수익권, 재정·규제특례 확보 필수”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성수 세무사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새만금이 단순 산업단지여 머물러 있어 아니라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수익권’, ‘재정특례’, ‘규제특례’라는 3대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년간 매립한 새만금이 현재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되고 있다”며 “이 구조로는 전북에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이 돌아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새만금 토지 소유권이 국가와 공공에 집중돼 있어 전북은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세무사는 해결책으로 새만금 일부 토지에 대한 장기 사용수익권을 전북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전체 면적의 10%만 임대 운영해도 연간 약 900억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매립지의 경우 정부 재정을 전북 공공기관이나 펀드에 투입해 직접 매립하도록 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상당 부분을 전북 자산으로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성수 세무사가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방향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기업 유치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며 “금융과 펀드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투자는 ‘뱅크 기업’에 불과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함께 김 세무사는 전북 발전 전략으로 ‘4대 권역’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메가

시티 추진은 현실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전북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기능별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권역별 발전 계획을 제시할 경우 약 20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중 일부를 산업 투자 펀드로 활용하면 전북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자신의 공약을 ‘오른 정책’으로 공개하며 “도민, 전문가, 정치인 누구나 보완·발전시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해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속도·공공성 강화 방안 제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과 갈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속도와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행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1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직 인수·강력 추진 모델을 전주형 도시정비사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그간 삼천동 개너리 아파트와 효자동 효자주공 재건축 구역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분절된 행정 절차 △시공사 선정 지연 △조합원 간 갈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통합성·공공성·시민 참여’를 제시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주요 건축 행정의 통합을 위한 ‘원스톱 심의 체계’ 구축 △공공·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일일 시스템’ 도입 △금융·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위원회’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재건축·재개발 속도에 따른 공무민 평가체계 개편 등을 내놓았다.

/이만호 기자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기계화촉진 개정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은 17일 농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장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휴머노이드 등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이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장비 연구개발 및 구입·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농업로봇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과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위기가 되고 있다”며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농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지능형 농업 기계 보급을 적극 지원해 농업 현장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AI 기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며 “특히 전북은 현재 피지컬 AI와 현대차그룹의 AI 관련 9조원 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 AI 농업기술의 개발·실증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휴머노이드 등 기술이 결합한 지능형 농업로봇이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장비 연구개발 및 구입·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검찰개혁 핵심 법안 첫 관문 넘었다”

민주 이성운 의원, ‘공소청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이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청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미흡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원팀 체제’ 구축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소청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과 여부에 따라 한국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말이 아닌 실행, 군산경제 다시 뛰게 할 것”

나중대 예비후보, 민주당 소속 군산시장 ‘도전장’

현대차 새만금 투자·RE100 등 결합 8대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 나선 나중대 예비후보가 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금 군산 대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군산 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18일 군산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와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신항 개발 등 군산 앞에 역사적 기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군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은 공장 폐쇄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시민들은 버텼다”며 “30년간 기다려온 새만금의 기회를 일지라와 경제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산 미래 비전을 담은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 성공 정착을 위해 시장 직



속 ‘투자지원 TF’를 설치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윈스톱으로 지원하고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와 2차전지, ESS, 수소·친환경 소재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고,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 산업을 연계해 군산을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문화·방산을 연계한 도시 전략도 제시했다.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와 해양 관광 활성화를 근대 건축을 활용한 영화·영상 산업 육성, 공공기지의 연계한 드론·무인기·방산 산업 집적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야간 팝업마켓과 ‘군산밤바다 포카리’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 구조를 만들고, 청년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야간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3,000개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 지역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군산=김만호 기자